

전남도-도교육청, 글로벌 인재 육성 힘 모은다



19일 오후 도청에서 열린 2022년 전남도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민선 8기 지사·민선 4기 교육감 첫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혁신도시 IB 교육과정 도입·직업계고 취업 지원 등 협력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19일 도청 정철실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2022년 전남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행정협의회는 민선 8기 지사체장과 민선 4기 교육감이 주재한 첫 회의다. 공동의장인 김영록 지사, 김대중 도교육감과 정철 전남도의원, 교육전문가 등 협의회 위원 14명이 참석해 앞으로 4년간의 상생과 동행을 다짐하고 교육 관련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의 내용은 전남도가 제안한 ▲빛가람혁신도시 내 눈송형으로 평가하는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 도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공동 추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사업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 3건과, 교육청이 제안한 ▲전남도 권역별 직업계고 취업 지원 통합운영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보조금 지원 등 2건이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과정은 스위스 비영리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가 주관하는 국제 공인 교육 과정으로 세계 161개국 5천464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두 기관은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빛가람혁신도시에 국제 인증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과정이 도입되도록 전남도(TF)를 구성·운영하고,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양질의 현장 실습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채용 설명회, 해외 연수 등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발달 단계에 맞는 성 인권 교육을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안심하고 양육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세계와 경쟁하는 위대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와 도교육청 간 협력이 필수"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도교육청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도와 함께 총출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으로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교육행정협의회는 '전남교육'이 전남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되도록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교육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교육사업의 협치와 조정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하기 위한 협력기구다. /김재정기자

벼 농가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지원

도, 올해 12만6천여명에게 ha당 평균 66만원 지급

전남도는 19일 "2022년 1월1일부터 전남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전남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가별 2ha 한도로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가입 농지는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다만 농업 및 종합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0.1ha 미만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전남지역 12만6천여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며, 평균 지급 단가는 ha당 66만원이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남도가 쌀 시장 개방

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 유지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경영 안정을 위해 200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지속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과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자금이다. 2001년 18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투입한 총사업비는 9천690억원에 달한다. 이는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농가에 지원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농자재·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개발공사,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전남개발공사는 19일 "전남도의 2022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전남도 공직유관단체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반부패 정책 노력,

성과, 확산 결과를 3개 부문 13개 지표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전남개발공사는 부패 예방, 청렴 관리, 사후 조치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청렴패트를 제도, 갑질·청렴시민감사관, 청렴해피콜 운영 등 부패 취약분야 개선 활동에

주력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 국제표준 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해 경영 전반에 부패리스크 관리를 위한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해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반부패·청렴 가치 확산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도-조폐공사 '지역화폐 광역플랫폼 구축' 협약

지역상품권 이용 편의·빅데이터 활용 생활서비스 확대

전남도는 19일 도청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편의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남행복지역화폐 광역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했다. 이는 전남도가 한국조폐공사 지역화폐 광역 플랫폼 구축사업에 우선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광역플랫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강화 ▲전남행복지역화폐 발전을 위한 공사-도-시·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전남행복지역화폐와 연계한 전남도 쇼핑물 등 부가서비스 결제 연동 및 정책수당 고도화를 통한 도민과 관광객 편의성 극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조폐공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전남행복지

역화폐 전용 앱을 개발하면 전남 22개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나의 앱에서 구매해 사용하게 된다. 전남도는 '전남행복지역화폐 광역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화폐의 발행과 부정유통 의심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체 생산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배달·쇼핑·정책수당 지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쉽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광역 플랫폼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상생·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Luxury Lifestyle

보면 기분 좋고, 앉으면 행복하다. 최고의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원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REAL PRO MAF1 | MA32 | MAK1

Panasonic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민주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 출범

'남도발 혁신정치' 가속화 정책 개발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9일 도당 회의실에서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획단은 도당 정책실 산하 한시 특별기구(2022년 12월-2024년 2월)로 운영되고 조성철 도당 정책실장이 기획단장을 겸임한다. 전남도의회와 시·군의회 소속 30~40대 청년·여성 그룹 및 지방자치와 혁신정책 전문가그룹 등 2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대전환 시대 남도의 새로운 활력과 활로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지

역 혁신을 촉진하고 '남도발 혁신정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 토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획단에 참여한 위원 모두 1개 이상의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정책현안 관련 정보·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 정치의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정책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젊은 정치인들의 성장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기획단 출범은 의미가 크다"며 "전남형 기본소득특위와 기획단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민주 광주시당 "국힘, 10·29참사 국조 참여해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국민의힘은 10·29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국정조사에 속히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시작됐으나 불참하고 유가족의 상처에 또 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을 가리켜

'참사영업'이 우려된다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국민의힘의 망언과 망발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참사 이후 50여일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망언과 망발의 정점을 찍고 있다. 아직 체 피우지도 못한 청년들이 국가의 부재 속에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의힘에 '국민'은 어디 갔는가. '국민의힘'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국정조사 참여를 거듭 요구했다. /백선강기자